

## “전주시도 블랙리스트 포함됐다”

〈문화예술계〉

###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경기 안산·성남시도 포함”  
김승수 시장 “시민과 함께  
시대정신 지켜나갈 것”

전주시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따르면 실제로 검열이나 지원 배제 등의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는 전주시를 비롯한 충북과 안산, 성남시가 포함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자체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단체장들이 있던 곳이다.

실제 김 시장은 지난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과정을 담은 영화 ‘다이빙벨’ 상영 여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당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했다.

‘자백’은 최근 MBC사장으로 취임한 최승호 전 뉴스타파 PD의 첫 연출작으로, 국가정보원의 간첩 조작사건을 다룬다. 정부를 비판한 작품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안겼다.

당시 최 전 PD는 “국내 상영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해외 영화제부터 출품하자”는 의견을 낼 정도로 국내 영화제에서는 상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당시 영화제 조직위원장이던 김 시장은 “영화의 본질은 영화를 만드는 기술이 아닌 표현의 자유에 있다”며 ‘영화 표현의 해방구’를 강조했다.

이에 그간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7년-그들이 없는 언론’을 비롯해 ‘천안함 프로젝트’, ‘귀향’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어 다른 영화제에서 상영

을 꺼리는 작품을 가감 없이 소개해왔다.

또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 정국 속에서 제작팀이 영화 제작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영화 ‘노무현입니다’에 과감히 투자하고 상영을 지원했다. 이 영화는 국내 다큐멘터리영화 사상 최단 기간 유료관객 1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아울러 2014년 11월 박 전 대통령의 전주 방문에 앞서 ‘세월호 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는 정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철거 같은 바닷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세월호 문제가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수막을 끝까지 지켜냈다.

이밖에도 김 시장은 또 당시 정부 정책과는 다르게 시민 중심의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국 단위 행정조직인 사회경제지원단을 만들고, 사회적 경제를 육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에 단 한 차례 빠짐없이 참여한 유일한 기초단체장으로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는 진정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김 시장은 “전주는 용기 있는 시민들이 사는 담대한 도시”라며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앞으로도 전주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시대정신을 지켜나가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은 1012명, 단체는 320개로 조사됐다. 이번 발표는 2008년 8월 27일 만들어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부터 2017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이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문에 첨부한 범죄일람표까지 약 10년에 걸쳐 작성된 블랙리스트 12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이다. /김민근 기자



“준희야 어딴니?”... 경찰, 공원 수색  
26일 전주시 우아동에서 사라진 고준희(5)양을 찾기 위해 경찰이 전주시내 한 공원을 수색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 한은 전북 “올 전북지역 4분기 경기 나아졌다”

올해 4분기 전북지역 경기가 3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26일 2017년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지역 내 업체 및 유관기관(총 56개)을 대상으로 생산 및 수요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와 소비·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전북지역 경기의 개선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4분기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서비스업은 소폭 증가했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지엠은 올란도 모델의 생산이 내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재고 확보를 위해 같은 모델의 생

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또 철강은 승용차 관련 매출 확대 및 중국산 철강 수입 감소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건설기계는 중국 수출 확대 지속으로 호조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 생산 중 도소매업은 긴 연휴의 영향으로 음식료품 관련 매출이 확대됐으며, 낮은 기온과 함께 할인판매 기간이 맞물림에 따라 아웃도어 상품을 중심으로 의류 판매가 증가했다. 관광은 신규 지역 축제의 성공적인 안착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실제 올해로 3회를 맞는 임실N치즈축제에서는 방문객이 작년 21만명에서 올해 45만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김민근 기자

### 본사 인사

▲채규남 임:기자 명:편집국 사회부 <12월 26일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격 조건
경력 및 신입기자	취재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 ▲ 접수기간: 2018년 1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 과학기술 성장 신규사업 발굴

전북도, 과학기술위 본회의서 진흥종합계획안 확정  
4차 산업혁명 연계 산업 고도화 등 3가지 목표 설정

전북도는 26일 최정호 정무부지사(위원장) 주재로 2017년 제3차 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과학기술 기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안)을 확정, 신규 국책사업 발굴과제(40건)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농생명·식품, 바이오융합, 탄소·융복합, 자동차·기계, 그린에너지, 창의융합 신산업 등 6개 연구회를 구성했다.

또한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34개 분과를 운영, 기획회의 71회 등 총 198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했다.

과학기술위원회는 2008년부터 총 303건의 과제를 기획하고 이중 89건을 국가사업에 반영, 4,360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의 성장동력발굴을 통해 도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회의 내용은 제5차(2018~2022)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국가과학기술 발전전략으로 전북도는 과학기술분야의 역량분석을 바탕으로 국가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2018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전북도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비전은 ‘융합과 혁신이 공존하는 스마트 전북 실현’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3가지 목표는 ‘전북 특화 과학기술 정책 기획을 통한 R&D 혁신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연계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성장 동력 창출 가속화’, ‘전북 과학기술 고급 연구인력 양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은 지방정부 주도의 R&D시스템 전환을 강조하는 추세로,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기술산업구조, 고용구조, 직무역량 변화 등에 대응한 지역내의 연구인력 확보

와 R&D 투자확대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발전용 가속화시킬 투자유치 및 기반확충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제조업의 혁신성장 추진 및 전북주도의 탄소

와 농생명 산업 투자확대 강화방향 등을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에 담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국책사업 발굴 40건(8,626억원 규모)은 농생명식품, 바이오융합, 탄소 융복합소재, 자동차 기계, 그린에너지, 창의융합 신산업 등이다. /김진성 기자

